

“금융과 경제성장·안정·분배” 토론회

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

(금융발전과 경제성장)

- ☐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대부분 규명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됨.
- ☐ 최근에는 금융발전이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too much finance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 본 논문에서도 이를 규명.
 - 그러나 이는 금융의 “발전”을 너무 양적 “성장”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.
 - 금융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면 실물경제 성장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함.
- ☐ 본 논문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.
 - 다만, 실증분석에서 기업을 상장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 유가증권 상장기업에는 금융발전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, 이는 본 실증분석에서 금융발전의 proxy로 대출증가율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. 상장기업은 대체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많이 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출증가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.
 -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소기업대출이 늘고 있어 저생산성 분야에 대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함.
- 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금융이 저생산성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가 금융혁신 전략 중에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.
 - 한정된 금융자원을 가계대출 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창업·벤처·중소기업에 배분해주자는 취지
 - 이는 실물경제 성장 및 금융회사 수익성 증대 양쪽 모두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.
 - * 생산성 높은 실물분야에 대한 자금배분 증가 → 실물경제 성장
 - *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있지만 생산성과 회수 가능성이 높

은 곳에 자금을 배분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.

- 이렇게 하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능력을 키워야 함.(이것이 일종의 금융발전임)
 - * 그동안 우리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 능력을 키우지 못한 이유 : 외환위기 이전 계획경제에 의한 자금배분 역할, 외환위기 이후 주택 담보 가계대출 위주
 - * 우수 대출 심사역을 양성해야함
 -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직종별 인력 선발 및 관리 필요
 - 대출대상인 각 산업 각 분야에서 직접 대출심사역을 발굴
 - * 대출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, 분석의 활성화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 증대 필요
 - 고객정보 수집, 분석 관련 분야의 비중이 커져야 함.(빅데이터 포함)
 - 이 분야가 금융권에서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분야임.
 - * 대출 부실화 시 너무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필요
 - *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 강화 :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여 대출해주고, 은행이 기업과 장기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정성적 정보를 많이 확보하여 심사에 활용
 - * 이렇게 되면 금융발전 → 생산성 높은 곳에 자원배분 → 경제성장

(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)

- ☐ 금융발전의 proxy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것
- ☐ 양적 금융발전 변수 사용 시
 - GDP 대비 민간신용 변수 사용하면 최근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(특히 우리나라에서)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신용증가가 불평등 확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임. (부동산 담보라는 초기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 증가로)
 - 신관호 교수님 논문에서도 최근 들어 민간신용 증가가 불평등 확대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일 것.
- ☐ 금융발전은 은행의 심사능력 등 질적 발전을 고려해야 함.
 -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심사능력 개선 → 자산담보가 없는 사람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출받아 사업 성공 가능 → 자산담보가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금융발전이

부의 불평등 개선 효과 (소득불평등도 개선할 것으로 보임)

- 또 심사능력 개선 → 그동안 심사가 어려워 대출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심사와 대출이 가능해짐 → 소득불평등 개선,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 획득 : 이것이 포용적 금융이 아닌가 생각함. 포용적 금융은 저소득층에 돈을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금융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는 금융회사에게도 새로운 수익기회가 됨.
- 이것이 금융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됨.
- 금융회사의 심사능력 개선을 측정할 proxy를 잡는 것은 어려워 보임.

(금융발전과 경제안정)

- 이 주제도 중요한 것은 금융발전의 정의라고 생각함. 강경훈-배영수 교수 논문에서처럼 양적 금융발전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합의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됨.
- 질적 변수를 쓰면 금융발전이 대체로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.
 -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산업의 발전으로(?) 과거에 없었던 CDO 같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해 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니 금융발전이 경제불안정을 이끌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CDO에 내재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금융발전이라고 하기 어려울 듯함.
 - 대출 심사 능력 개선, 위험관리 능력 개선,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금융발전 변수로 계량화된다면 금융발전이 금융안정 나아가 경제안정을 이끄는 것은 당연
 - 금융감독시스템의 효율화,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도 금융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
 - 물론 이런 것들을 계량화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다만 금융이 발전하면 과거에는 리스크가 커서 금융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에도 금융이 공급되면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.
 - 포용적 금융도 그 한 예가 될 것임.